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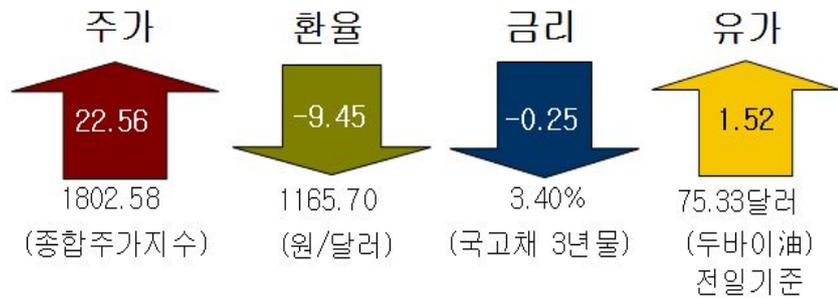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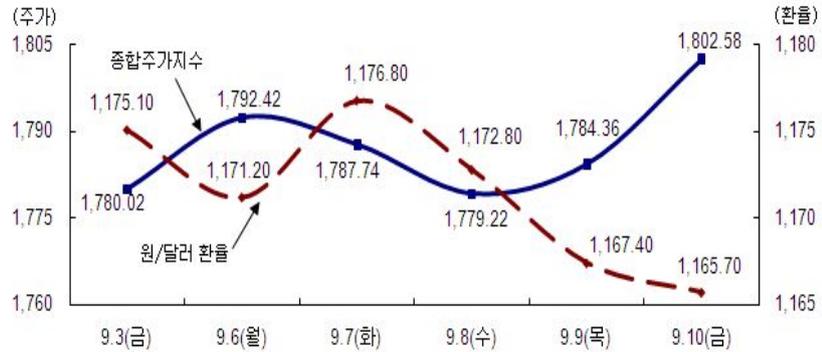
10-34(통권 414호)
2010.9.10



-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구조 확립해야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3~9.1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구조 확립해야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2072-6216, dbpark@hri.co.kr)

Executive Summary

□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구조 확립해야

■ 서민금융의 정의와 대상, 부진 현황

서민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약 950만 정도로 추정되는 저신용자(6~10 등급)에 대한 금융지원을 일컫는다. 금융위기 이후 각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소홀로 인하여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동안 고신용자의 비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6~10등급)의 잔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최근 희망희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자금수요에는 못 미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

이처럼 서민금융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미흡이다. 외환위기 직후 미흡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영업이 크게 위축되어 있어서, 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높은 연체율이다. 높은 연체율과 신용위험은 수익성 하락과 서민금융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은행의 경우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PB 금융 등 부유층 시장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낮은 서민금융을 자연스레 소홀히 하고 있다. 저축은행도 외환위기 직후 영업기반이 약화되면서 수익성이 미흡한 서민금융 보다는 고수익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서민금융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능력의 미흡이다. 서민금융은 금융기법에 있어 가장 첨단적인 무담보 신용대출이다. 따라서 서민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취약한 개인신용분석 시스템을 보완하여 과학적인 심사와 가격정책, 리스크관리 등이 절실하나, 은행과 일부 대형 저축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인프라 구축과 과학적인 접근이 매우 미흡하다. 넷째, 서민금융기관의 높은 대출금리와 이에 따른 기피 현상이다.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전통적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 금리가 일반은행에 비해 크게 높고, 서민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저하 등을 우려하여 서민들이 서민금융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

■ 시사점과 과제: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구조 확립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구조 확립이 시급한 바, 첫째,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규모별 경영건전성에 차이가 심한 바,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둘째,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 서민금융의 역할 증대를 위해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취약한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과학적인 서민금융 접근과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각 금융권별 중앙회를 통하여 통합형 CB(Credit Bureau)를 설립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신용리스크를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넷째, 서민에게 높은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일정 기간의 가산금리 평균을 감안하도록 제도에 반영하고, 서민금융기관 이용 시 소비자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구조 확립 >

서민금융의 정의와 부진 현황

- 서민금융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취급 가능
 - 약 95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6~10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금융지원
- 금융위기 이후 모든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을 소홀로 저신용층 신용지원 더욱 약화
 - 고신용자의 비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 잔액은 크게 감소
-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 확대 노력은 서민의 자금수요에는 한계
 - 미소금융,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적 서민금융 확대 노력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

- (서민금융기관 영업기반 취약) 불완전한 구조조정 상태에서 영업기반 크게 위축
 -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서민금융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 (서민금융의 낮은 수익성) 높은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서민금융 회피
 - 국내은행,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주택담보대출과 PB 금융 등에 주력
 - 저축은행, 고수익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
- (과학적인 접근 능력 미흡) 과학적인 심사와 가격정책, 그리고 리스크관리가 미흡
 - 일부 대형 저축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흡
- (금융소비자의 외면) 건전한 서민들은 가급적 서민금융기관의 이용을 자제
 - 높은 금리와 신용등급에 미치는 악영향 등으로 서민금융을 자제

시사점과 과제 :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구조 확립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의 중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하부구조 안정화가 중요하나 재정정책만으로 한계 - 서민금융 경쟁력 강화로 악순환 고리 차단 절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금융 대상 확대 및 금리수준 하향 등 서민금융 활성화
<p>서민금융 시스템의 선순환구조 확립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 조달비용 절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수익모델 구축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수익성을 제고 -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회를 통한 데이터 축적과 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인 경영과 리스크관리 - 높은 가산금리 부과 산정, 서민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악영향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1. 서민금융의 정의와 대상

○ 서민금융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으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나름대로 서민금융 취급이 가능

- 서민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 주택마련, 그리고 일시적 자금부족 상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을 일컫음
 -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신용등급 기준으로 저신용층인 6~10 등급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일컫는 경향
- 신용등급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전통적 서민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에서 서민금융을 취급 가능하다고 판단¹⁾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신용대출 영역과 서민금융 영역에는 차이가 많음
 - 국내 은행도 고신용자뿐만 아니라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서민금융의 영역과 겹치는 부분은 6등급에 불과함
 - 제2금융권, 대부금융기관, 대안금융 등은 서민금융을 다수 취급하고 있으나, 9등급과 10등급 등 사각지대가 존재함

< 금융기관별 신용대출 취급영역과 서민금융의 영역 >

	평균 신용등급	신용대출 취급 영역										비고					
		상위			중위				하위								
		1	2	3	4	5	6	7	8	9	10						
은행	5.30															희망출세대출 (7등급 이하)	
서민금융기관	저축은행	6.94															햇살론 (6등급이하)
	신용협동기구 상호금융																
제2금융권	캐피탈 (할부금융, 카드)	5.97															
대부금융기관(등록)																	
대안금융																	미소금융 (7등급 이하)

주: 1) 가중평균신용등급은 2010년 4월 기준 담보대출을 포함한 KCB(Korea Credit Bureau) 자료
 2) 신용대출 취급영역은 각종 언론매체, 보도자료, KCB 등의 자료를 통해 저자 추정치

1)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은 지역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과 조합원의 저축편의 제공과 여수신을 통한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농협 단위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 등이 있음

○ 현재 국내 저신용자는 성인의 25%에 해당하는 95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저신용일수록 금리수준이 높아짐

- 신용조사기관(CB: Credit Bureau)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신용등급 6~10등급 저신용자 수는 약 950만명(25%) 정도로 추정되고,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
 - 고신용자(1등급~5등급) 수는 약 2,900만명(75%)이며, 이중 5등급이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신용등급별 금리수준은 연체율 및 불량률 등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상승

< 신용등급별 분포와 금리 수준 >

(단위 : 천명,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합계
신용등급분포	3,049 (7.96)	5,146 (13.43)	4,421 (11.54)	5,228 (13.64)	11,020 (28.76)	1,921 (5.01)	3,595 (9.38)	2,270 (5.92)	1,028 (2.68)	641 (1.67)	38,319 (100)
평균 금리	6.25	7.25	9.32	11.85	14.54	16.17	18.33	20.13	22.04	22.84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 평균금리의 경우 KCB, 올크레딧 보유 데이터 기준

주 : 1) () 안은 비중, 2) 신용등급은 2010년 2분기말 현재, 평균금리는 2010년 2월말 기준.

2. 서민금융의 부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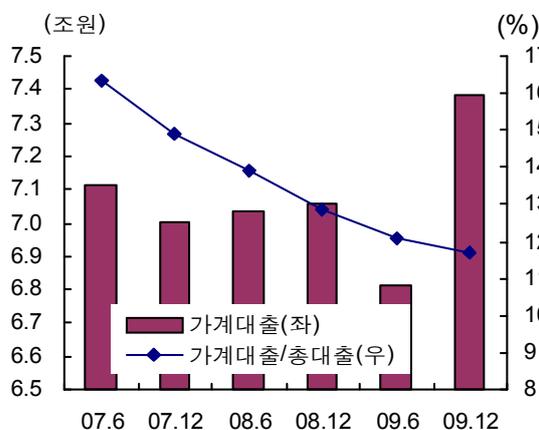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각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소홀로 인하여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도 약화되고 있음

- (은행)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담보능력이 없고, 신용도가 떨어진 저소득층 대상의 서민금융 기능이 크게 약화
 - 외환위기 이전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이 서민금융을 주로 취급하였으나, 이들이 민영화되면서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상실하였고, 기타 은행들도 전체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소액대출 규모를 축소²⁾
 - 그나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금리 등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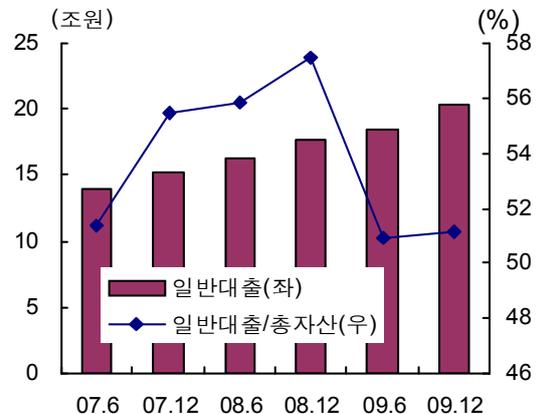
2) 국민은행은 1963년 서민금융을 주도하는 국책은행으로 출발.

- (상호저축은행) 대표적인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2년 이후 대출금이 크게 늘어났으나, 대부분 주택 등 부동산 PF 등 부동산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대출 금융지원이 매우 약화됨
 -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가계대출이 크게 떨어졌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총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신용협동기구) 서민금융 기능이 약화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그 기능 약화 현상이 지속됨
 -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일반 대출이 증가하였으나 총자산대비 일반대출 비중은 크게 줄어짐
 - 최근 일부 여신전문금융기관들도 고금리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중상위권 신용평가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대안금융)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하위 서민층(빈민층,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을 위한 빈민금융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초기단계
 - '09.12월 제도권 금융 밖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자활을 위해 미소금융 사업 출범
 - 2010년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56개 지점(수도권 24개, 지방 32개)이 설립되었으며, 총 3,958명에 237억원 대출

< 상호저축은행 대출 잔액 현황 >



< 신용협동기구 대출 잔액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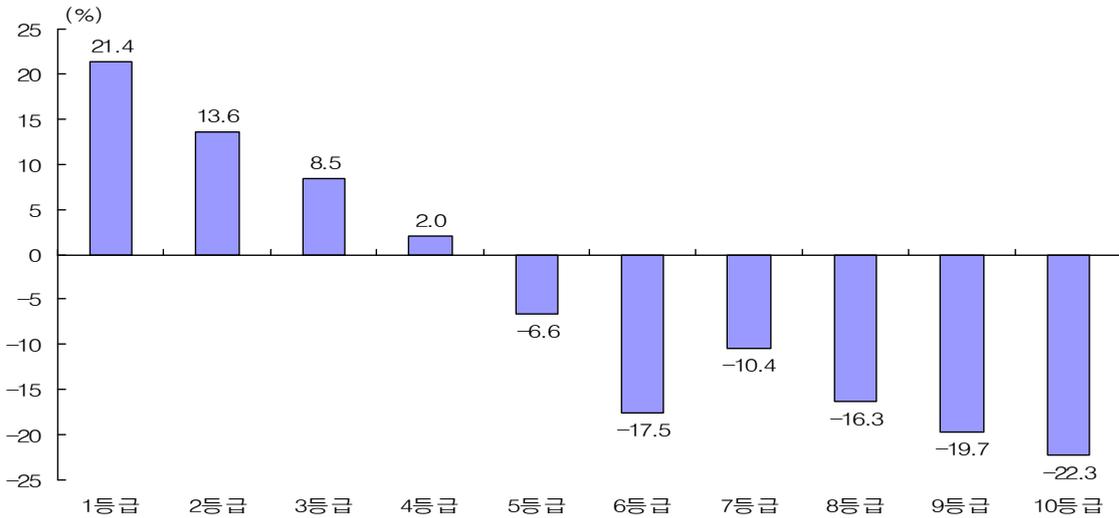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 금융위기 이후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 금융위기 직후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고신용자의 대출 잔액은 크게 늘고, 반대로 저신용자의 잔액은 크게 감소³⁾
 - 은행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행동으로 고신용층인 1~5등급자의 대출액은 같은 기간 16조9000억원(6.6%) 증가
 - 반면 저신용층인 6~10등급자에 대한 대출액은 21조7000억원(21.7%) 감소하고, 신용등급이 내려갈수록 대출감소율이 더 커짐

< 신용등급별 비주택담보 개인대출잔액 증감률 >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주 : 2008년 12월말 ~2009년 12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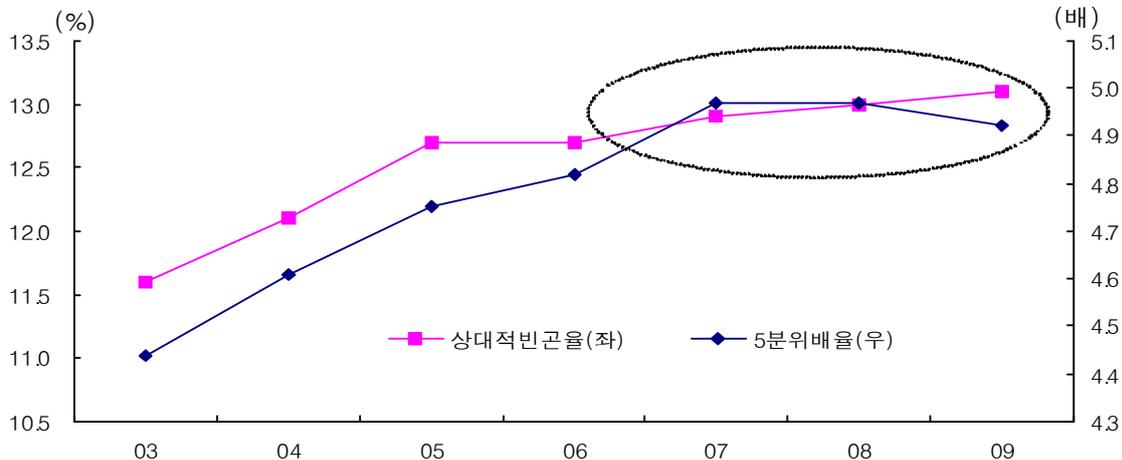
- 이에 따라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이 강조되고 있음
 -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과 정부는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
 - 정부는 미소금융('09.12월), 제도권 금융기관의 '햇살론'('10.7월)과 '희망홀씨대출'('09.3월) 등 서민들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환대출, 채무조정 등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3) 금융위원회가 한국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내일신문 2010년 8월 25일자)

○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서민경제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비해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일자리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악화 지속
 - 상대적빈곤율은 2004년 12%대로 진입한 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13%대로 상승하였으며, 2009년에도 상승세를 지속⁴⁾
 - 계층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의 경우 정부의 서민대책 등에 힘입어 2009년 소폭 개선되었으나 상승세를 유지

< 가계소득 분배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가구는 전국(2인이상 비농가)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서민금융 수요에 비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역차별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약 950만 명에 해당하는 저신용자가 평균 1년 500만 원의 금융수요가 있다고 가정⁵⁾할 경우 매년 47.5조원이 필요
 - 햇살론의 경우 정부와 서민금융회사 공동으로 보증재원을 조성(2조원)하여 향후 5년간 10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며, 희망홀씨대출은 신용대출 7,684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대출 1조5,324억원로 계획
 - 뿐만 아니라 정책적 서민금융정책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면도 가능

4) 상대적빈곤율은 소득수준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인구비중

5) 서민들의 부족한 자금을 정확히 추정하긴 어렵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햇살론’이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생계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어서, 그 절반인 500만원을 연간 서민금융 수요로 가정

3.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

○ (불완전한 구조조정) 외환위기 이후 미완의 구조조정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본연의 서민금융 취급이 어려움

- 외환위기 이후의 강도 높은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달리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이 크게 위축
 - 은행의 경우 구조조정이 완료되면서 시중은행(7개)과 지방은행(6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영업력이 강화
 -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단위조합) 등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이 안정된 2004년 이후에도 구조조정이 지속
 -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이 2000년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후 다소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정상영업성과를 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자본이 취약해져 영업기반이 공고하지 못하여 지속가능성 근간도 불안

< 저축은행의 회계연도(FY)별 당기순이익 추이 >

(단위 : 억 원)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3,379	5,493	6,271	3,412	469

자료 : 금융감독원

- 불완전한 구조조정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한 서민금융기관들은 서민금융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이 정상영업성과를 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자본이 취약해져 영업기반이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민금융 소홀
 -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지원이 크게 축소됨 (은행권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등 전통적 서민저축금융기관까지 거액 예금 유치 노력)

<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의 회계연도(FY)별 감소 추이 >

(단위 : 개)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저축은행	112	110	109	107	106
신용협동조합	1,066	1,051	1,024	1,007	994
단위조합	1,546	1,517	1,441	1,417	1,409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FY는 회계연도(Fiscal Year). 단위조합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단위조합을 지칭

○ (높은 연체율과 신용위험)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이 강화된 은행권이나 영업기반이 약화된 저축은행 등이 모두 신용위험이 높은 서민금융을 회피

- 국내 은행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 시키고, PB 금융 등을 통하여 부유층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높은 신용위험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서민금융을 소홀
 - 2005년말 현재 7개 시중은행 중 3개가 외국계 은행(SCB 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외환은행 등)이며, 비외국계 시중은행의 외국인지분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중시
 - 외국계로 된 은행이나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아 사실상 외국계화된 은행들은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수익성이 높은 부유층 시장을 적극 공략
 - 이에 따라, 소득이 낮고 담보능력이 취약한 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은 크게 약화됨

- 저축은행들도 외환위기 직후 영업기반이 약화되면서 수익성이 불완전한 서민금융 보다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절실히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수익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
 -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들은 불완전한 구조조정 등으로 자기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영업기반이 공고하지 못하였음
 - 부동산 PF, 건설업, 부동산업 등 부동산관련 업종의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총 대출 중에서 부동산관련 업종의 비율이 50%를 상회⁶⁾

< 금융기관별 평균 및 신용 하위등급 연체율 추이(2010년 4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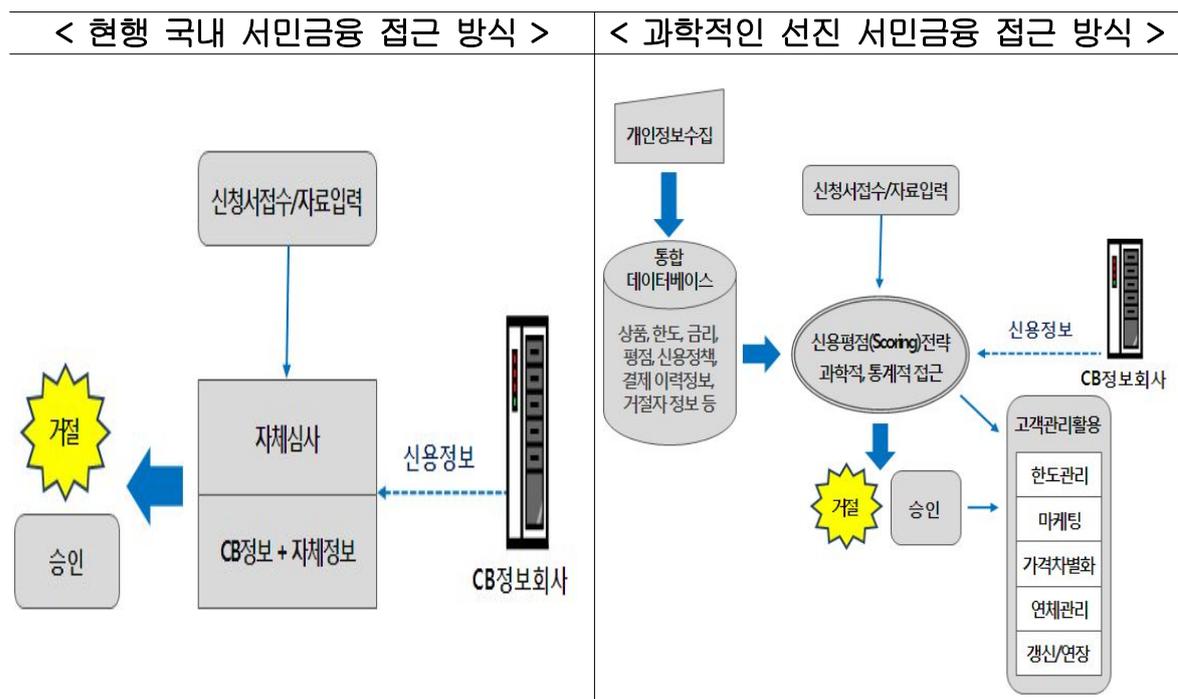
	평균 연체율	신용하위(8~10) 등급
은행	0.44%	6.8%
신용협동조합	2.21%	9.8%
상호저축은행	18.47%	37.8%
금융기관전체	1.07%	9.1%

자료 : KCB(Korea Credit Bureau)

6) 2009년 부동산관련업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KAMCO에 환매조건부 부동산 PF 매각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과학적인 접근 능력 미흡) 금융기관들의 무담보 서민금융에 대한 경영능력이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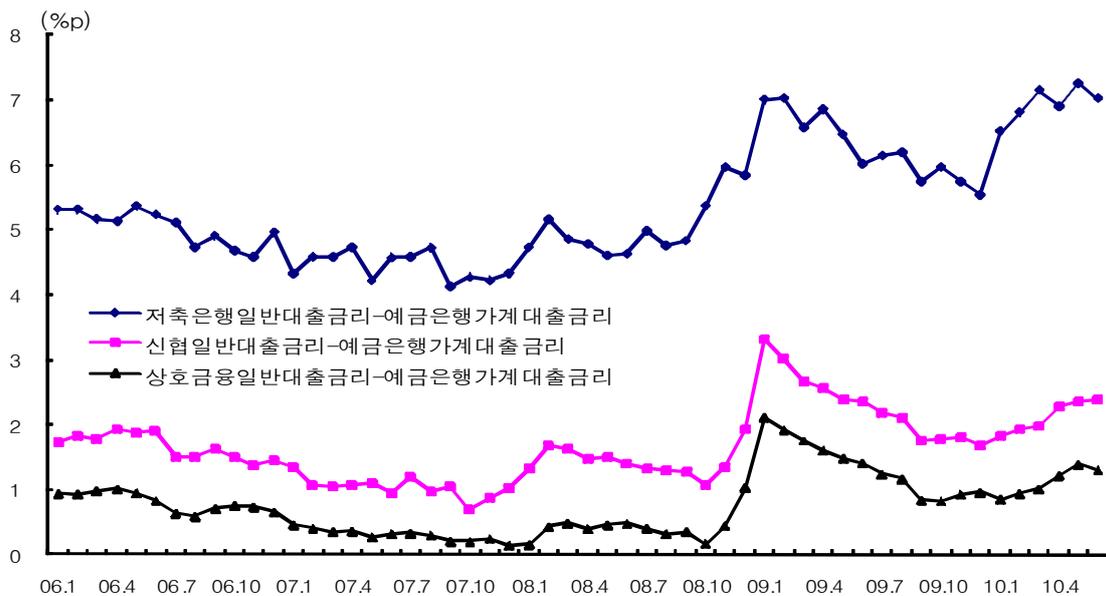
- 서민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취약한 개인신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심사와 가격정책, 그리고 리스크관리가 절실
 - 성격상 서민금융업은 소매금융의 핵심인 무담보 신용 소비자금융업으로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일종의 첨단금융이며, 상당 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한 일종의 장치산업
 -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연체율 감소가 소민금융의 핵심 업무
- 일부 대형 저축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
 - 한국금융학회 설문조사 응답 결과(2007.5) 상호저축은행(88개)의 73.9%(65개)가 개인신용등급 부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구축 (금융감독원 '07.10.30 보도자료 참조)한 상태이며, 기타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우 매우 열악한 상황
 -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들은 개인 신용등급 부여를 위한 전산분석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 (높은 대출금리) 높은 금리와 신용도 저하 가능성 등 불합리한 측면 때문에 건전 서민금융 소비자들의 서민금융기관 접근을 기피

- 저신용이지만 상환의지가 높은 서민들의 경우 서민금융기관들의 높은 대출금리로 인하여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고 있음
 - 저축은행의 일반대출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보다 무려 6%p 높은 수준
 - 신용협동조합의 일반대출금리와 상호금융의 일반대출금리 등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보다 각기 2%p, 1%p 이상 높은 수준
-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서민금융 고객들이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자신의 신용등급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자제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음
 - 대부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신용을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 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
 - 제도권의 서민 금융기관 이용" 자체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면, CB 등급 산출 모형의 비합리적인 문제점 개선 필요

< 예금은행 대비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차이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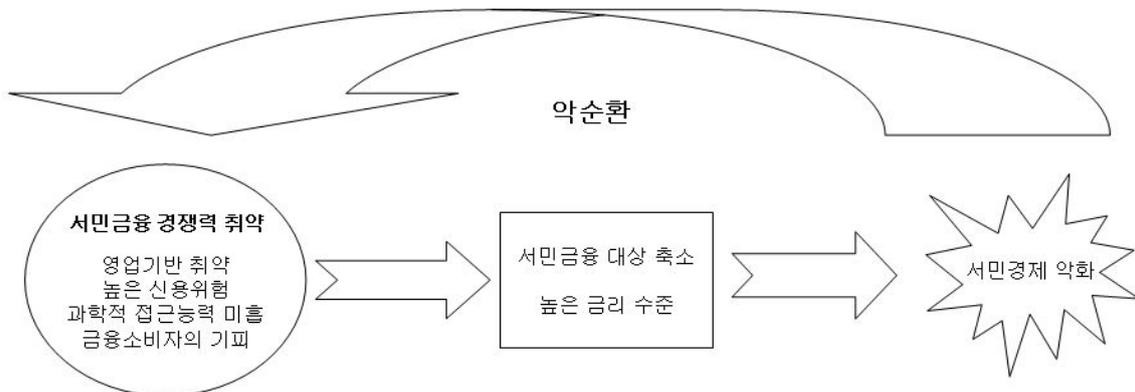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4. 시사점과 과제 :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경제 하부구조의 안정화와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서민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회 안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
 - 서민경제 위축이 지속될 경우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으며,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지속성장 기반이 잠식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거시적인 재정지원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세수의 증대가 쉽지 않은 상황
 -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되는 서민은 곧바로 고리의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생존 위협에 직면
 -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서민금융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서민금융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수준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
 - 서민금융의 경쟁력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대상자들이 확대되기 어려운 악순환 구조에 빠짐

< 현행 서민금융 악순환 구조 >



○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서민금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근본적으로 서민금융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함

- 첫째,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 현재 규모별 경영건전성에 차이가 심한 바,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서민금융 활성화 절실
 - 지역 상호금융이 은행으로 전환한 일본의 제2지방은행을 벤치마킹하여 자산규모가 커진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의 중점 지원하는 지역은행화하여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의 금융업의 축을 담당
 -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대부분의 중소 저축은행과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바, 자본금확충 후 구조조정 후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재탄생시킴
 - 부실서민금융기관은 조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실한 금융기관의 우량정보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게 차별화된 감독정책 실시
 - 부실과 금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실추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경영진을 견제하고 금융사고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부감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 확립

- 둘째,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서민금융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열위에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비용 구조로는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바, 일정조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
 - 은행에 비해 업무영역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이지론)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상품 개발 능력 제고와 이에 필요한 정책적 규제 완화
 - 비과세 예금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중앙회의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익기반을 다원화할 필요

- 셋째, 과학적인 경영과 리스크관리 정착.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통계에 근거한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과 리스크관리가 절실함
 - 과학적인 리스크관리는 데이터를 기초로 통계적인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 내부자료, 정보수집 기관 자료 등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의 개별 서민금융기관들은 자산규모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低신용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
 - 따라서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등을 통한 크레딧뷰로(CB; Credit Bureau)를 만들어 고객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전략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 실정 및 금융 환경에 부합될 수 있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운용할 필요
 -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연체율 감소에 노력하는 한편, 위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격정책을 수립

- 넷째, 높은 가산금리 조정 등 제도 개선. 서민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책정 등을 시정하고, 서민금융기관 접촉한 서민금융 소비자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
 - 서민금융기관들이 개인의 신용도에 비해 높은 가산금리가 부여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를 검토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등급에다 소비자 측면에서의 논리적 설명력도 더하여 합리적인 CB 등급 산정 필요
 - 건전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기관 사용 시 자신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각 서민금융기관 협회 또는 중앙회 등에 금융소비자들에게 건전한 소비문화,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2072-6216)

7)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일정 기간의 가산금리 평균 이상이 넘지 않도록 법적 장치 마련 등도 고려할 필요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미국	0.4	-2.7	-5.4	-2.4	-6.4	-0.7	2.2	5.6	3.3	2.7
유로 지역	0.6	-0.4	-1.9	-4.1	-2.5	-0.1	0.4	0.1	1.0	0.2
일본	-1.2	-4.9	-10.3	-5.2	-13.7	6.0	-0.6	3.8	2.4	5.0
중국	9.6	9.0	6.8	8.7	6.2	7.9	9.1	10.7	10.5	11.9
한국	2.3	3.1	-3.4	0.2	-4.3	-2.2	1.0	6.0	4.5	8.1

주: 1) 2008, 2009년 한국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9월3일	9월1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2.70	2.76	0.06%p
	엔/달러	90.76	96.65	92.93	84.36	83.94	-0.42 ¥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2889	1.2691	-0.0198\$
	다우존스지수(p)	8,776	8,447	10,428	10,448	10,415	-33p
	닛케이지수(p)	8,860	9,958	10,655	9,114	9,098	-1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65	3.40	-0.25%p
	원/달러(원)	1,259.5	1,273.9	1,164.5	1,175.1	1,165.7	-9.4원
	코스피지수(p)	1,124.5	1,390.1	1,682.8	1,780.0	1,802.6	22.6p

주: 9월 10일 해외지표는 전일(9월 9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9월3일	9월1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74.36	74.26	-0.1\$
	Dubai	36.45	71.85	78.06	74.25	75.33	1.08\$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72.77	273.21	0.44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